

교권 보호 대책보다 교사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7월 18일 서울 서초구의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차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교사들의 애도와 분노가 쏟아졌다.

이번 사건은 현재 경찰이 조사 중이고 고인이 유서를 남기지 않아 그 전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일기장에는 학교 업무로 힘들어 했음을 짐작케 하는 내용이 있었다.

“월요일 출근 후 업무폭탄과 ㅇㅇ[학생의 이름] 난리가 겹치면서 그냥 모든 게 다 버거워지고 놓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 들었다.”

고인의 일기 내용은 현재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압축적으로 보여 준다.

고인은 학교에서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리 업무를 맡았는데, 최근 도입된 4세대 나이스가 먹통 사태를 일으켜 전국 학교의 업무가 마비되는 등 문제가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고인의 업무 부담은 상당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실시와 이를 위한 교사 충원 요구를 계속 무시해 왔다. 윤석열 정부는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오히려 교사 정원 감축을 추진 중이어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은 줄어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더해, 고인은 학부모들의 민원을 처리하느라 큰 고통을 겪은 듯하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이 고인의 동료들

에게서 받은 제보에 따르면, 최근 고인이 맡았던 학급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긁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학부모에게서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많은 교사들도 학부모들의 온갖 민원 때문에 수업과 학생 생활 지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뒤 교사들을 위축시키는 일이 빈번해졌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일단 아동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이나 교사의 소명 기회도 없이 바로 직위 해제, 담임 교체 처분 등 교사와 학생의 분리 조치가 진행된다. 곧장 교사 징계가 실행되는 것이다. 게다가 교사 스스로 소송을 치르며 아동 학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불만을 가진 학생이나 학부모가 악의적으로 교사를 아동 학대로 신고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반면, 교사의 처지에서는 아동학대 신고를 한 번만 당해도 교직 인생에 치명적인 상처가 된다.

그래서 많은 교사는 자신도 아동 학대 혐의로 신고당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은 무조건 이행해 줘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다.

이처럼, 많은 교사는 과중한 업무와 학부모의 민원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교사들이 서이초 교사의 죽음에 동병상련의 심정을 느낀 이유다.



학생인권조례가 문제?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의 불만이 터져나오자 정부와 각 교육청은 부랴부랴 교원단체, 교사들과 간담회를 여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행태를 보면, 그들은 제사보다 젓밥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교권 추락의 주요 요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하며 이를 무력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곳은 17개 시도교육청 중 6곳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나머지 시도교육청 11곳에서는 ‘교권 추락’이 없었다는 말인가?

게다가 학생인권조례는 상징적인 선언 이상의 효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은 치열한 입시 경쟁과 억압적인 교육 환경 때문에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없다. 또, 조례 특성상 강제력도 별로 없다. 초·중·등교육법상 학칙 제정의 권한이 학교장에게 있어, 아직도 반인권적 학칙이 횡행한다.

이런 단순한 사실만 보더라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학생인권조례 공격은 데마고기라는 점을 알 수 있다.

▶ 뒷면으로 이어짐



▶ 앞면에서 이어짐

교권 보호 대책은 미봉책일 뿐

한편, 정부와 각 교육청이 내놓은 방안은 대부분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들이다.

예를 들어, 부모들의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 등을 위한 법 개정, 교사의 생활지도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가이드라인(고시)안 마련 등이다.

또, 학부모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고, 교사가 개인 전화로 민원 요구를 받지 않도록 통합 민원창구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중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가 아무런 조사도 없이 즉각 직위해제 되는 것을 막는 방안은 교사의 부담을 약간 덜어 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권 보호’ 대책은 교사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는커녕 교사들을 계속해서 갈등과 분란에 빠트릴 공산이 큰 미봉책이다.

예컨대, 많은 교사들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우려한다. 학교폭력 사안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후 갈등 심화와 소송으로 학교 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고, 교사의 교육적 개입은 설 자리가 줄어들었다는 점을 많은 교사가 이미 체험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거나 교육활동 침해로 징계 대상이 되면, 아동학대처벌법으로 교사를 고소하는 학부모가 생겨나고 있다.

마찬가지로, 법과 정부 가이드라인 등으로 학부모의 악성 민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권을 세세하게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사안에서 그것이 정말 ‘악성’ 민원인지, ‘정당한’ 생활지도권인지를 둘러싸고 또다시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역대 정부가 10여 년 전부터 다양한 교권 강화 대책을 내놔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는 점도 봐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됐고, 교원 지위법을 개정해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조치하도록 하고, 교육청이 심대한 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초·중·고교육법을 개정해 교사가 학생 생활을 지도할 권한이 명문화됐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이 교사의 교육권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느낀 교사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학부모가 민원과 소송을 위협하기만 해도 이런 권한들은 행사되기 힘들고 기구들은 마비될 수밖에 없다. 이번 대책들도 그렇게 될 공산이 크다.



‘학부모 권리 vs 교사 권리’?

20여 년 전과 비교해 보면 오늘날 교사의 사회적 지위는 분명 하락했다.

이전에 교사들은 전문성과 권위를 인정받는 노동자였다면, 이제는 여느 서비스 노동자와 다를 바 없는 지위로 떨어진 것이다.

특히, 부유층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교사들은 더욱 무시를 당할 것이다. 서이초 사건 이후 한 교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요즘은 오히려 교사들이 강남 지역을 기피한다. 강남·서초는 잘 사는 동네고 부모들이 법에 대해서 해박하기 때문에 소송이 유난히 많다. … 그런 부분들이 교사들한테는 실질적인 위협으로 작용한다.”

더 일반적으로도, 광범한 지역에서 많은 교사가 학부모들의 다양한 민원에 시달리는 것을 보면, 노동계급 학부모들도 교사들을 여느 서비스직 노동자로 인식하는 듯하다.

이런 현상은 1990년대 후반부

터 더욱 강화된 교육 상품화와 관련 있을 것이다.

그동안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이 격화되고, 각국 정부가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 교육을 확대하면서, 초·중·등 교육은 대학 진학을 위한 교육 서비스 구입처라는 성격이 더 강화됐다. 이른바 ‘교육 개혁’은 학교 내, 학교 간 경쟁을 더욱 강화하면서, 이를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다.

게다가 한국은 대학 입시 경쟁이 유난히 심하다 보니 초·중·등학교는 입시 문제를 풀이하는 학원과, 그리고 학교 교사들은 학원 강사들과 별 다를 게 없다는 인식이 매우 강하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로서 학부모의 권리’에 맞서 ‘교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해법이 되기 힘들다. ‘권리 대 권리’의 갈등이 부각되며 구조적 문제는 가려지게 된다.

치열한 입시 경쟁과 억압적 교육

환경에서 가장 억압받고 소외되는 이들은 바로 학생들이다. 학생들의 극심한 소외와 억압은 학교 생활에서 교사의 지도에 대한 불응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다시 강화하며 엄벌주의로 대처하는 것은 학생의 반발심을 키우고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만 키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갈등이 부각될수록 교육 환경에 책임이 있는 정부와 대기업들은 면피를 하고 빠져나가기 쉬워진다는 점이다.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이번 대책에서 교사 업무 경감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별 효과도 내기 힘든 ‘교권 강화’에 기대를 거는 게 아니라, 학급 당 학생 수 감축, 교사의 교육 외 업무 감축, 상담·특수 교사 증원 등 교사 처우 개선과 전반적인 교육 환경을 개선하라고 요구하며 싸우는 것이다.

<노동자연대> 웹사이트에서 이 글의 전문과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wspaper.org

초등교사 사망을 계기로 살펴본다

교권과 학생인권의 대립이 문제인가?

8월 16일(수) 오후 8시
발제 정원석 현직 교사, 전교조 조합원

서울의 어느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극을 계기로 교사들의 누적된 불만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교사 수천 명이 집회를 열기도 했죠.

정부와 교육부는 학생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돼 온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며 교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요즘 교사들이 겪는 고통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학생과 교사 간, 학부모와 교사 간 갈등의 원인과 해법은 무엇일까요? 오랫동안 교직에 몸담아 온 현직 교사에게 들어봅니다.

참가신청 bit.ly/0816-meeting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문의 ☎ 02-2271-2395, 010-4909-2026 [문자 가능] 카카오톡 1:1 오픈채팅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노동자연대 TV

